2018년 업무추진계획

2018. 1.

행정안전부

목 차

Ⅰ. 2017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····· 1

Ⅱ. 2018년 중점 추진과제 ····· 4

1.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·균형발전 추진 ···· 6

2. 국민이 주인되는 열린 정부혁신 ····· 11

3. 4차 산업혁명 시대, 지능형 정부 실현 ····· 16

4.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·· 20

5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 ··· 25

Ⅰ. 2017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

1. 2017년 성과 평가

◇ 대통령 취임식, 국정기획자문위 운영, 정부조직개편 등 **새정부 출범 지원**
◇ '**100대 국정과제**' 중 자치분권·정부혁신·국민안전 등 **10개 핵심과제 추진**

□ 2017년 성과

○ 자치분권 추진 기반 마련

- 「자치분권 로드맵」(5대 전략 30대 과제) 발표 등 **자치분권 청사진 제시**
- **대통령 주재 시·도지사 간담회**(6.14., 10.26.), 지자체·분권단체가 함께하는 '**자치분권 여수선언**'(지방4대협의체, 10.26.) 발표

○ 국민 참여·소통의 초석 마련 및 전자정부서비스 개선

- '**광화문1번가***' 운영, **정책과정 대국민 공개** 및 **공공데이터 개방** 지속 추진
  * 180,705건 정책제안 접수, 1,718건의 제안 채택,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
- 정부서비스 통합창구 '**정부24**' 개통, '**클라우드 온-나라**' 확산

○ 중앙-지방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현

- 재난안전 특별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**열악한 재난안전 여건 개선**
- **포항지진**에 대한 **신속한 대응 및 국민소통 강화**
  ※ 재난문자 송출 소요시간 : 경주지진('16.9.) 8분 21초 → 포항지진('17.11.) 35초

□ 보완 필요사항

○ 주민의 삶과 연계된 "실질적 자치분권" 강화 요구

- 단체장·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탈피, 주민참여 확대로 **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** 추진 필요

○ "국민참여" 및 "생활체감 정부서비스" 확대 필요

- **정책과정에서의 상시적 국민참여**를 위한 제도개선, 생활안전·일자리 등 **민생현장 접점 중심**의 정부 운영체계로의 개편 요구

○ "현장에서 작동"하는 재난대응체계 구현 필요

- 재난 인프라 취약성 개선 및 만연한 안전경시 관행 근절로 **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·안전 관리체계 확립 필요**

2. 정책여건 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

【 정책여건 진단 】

경제·과학기술

경제성장 둔화,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

- 경제활력 감소, 일자리 문제
- 데이터가 신산업 발전 원동력으로 부각

사회문화

국민참여 확대 및 공공성 회복 요구

- 사회적 가치 중요성 공감대 확산
- 국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 대두

지역여건

- 인구·자본 등 수도권 집중, 군소지역 소멸위기
- 민선7기 출범, 중앙-지방 협업요구

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

재난안전

- 지진, 대형화재 등 재난과 폭염·한파 등 이상기후 빈발
- 안전 중요성 국민인식 확대

대형재난 반복, 국민의 안전 인식 변화

【 향후 추진방향 】

□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도약

○ 지방의 권한과 기능의 획기적 확대 및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

○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균형장치 강화로 균형발전 기반 구축

□ 국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「신뢰받는 정부」 실현

○ 정부 정책형성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 참여 대폭 강화

○ 사회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정부 운영체계 전환 및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

□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

○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현, 민생현장 중심의 공무원 충원 및 정부조직 효율화 병행 추진

○ 데이터 개방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□ 현장중심의 재난안전대책 수립·추진으로 「국민 안심시대」 구현

○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가동,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일소

○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

Ⅱ. 2018년 중점 추진과제

2018년 정책 목표

국민과 함께 만드는 실질적 자치분권·안전 선진국 실현

1.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·균형발전 추진	1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 2 강력한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 3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 4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2. 국민이 주인되는 열린 정부혁신	1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실현 2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 3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 4 정부운영 지원기능의 투명화·선진화
3. 4차산업혁명 시대, 지능형 정부 실현	1 인공지능·빅데이터 활용, 지능형 행정 실현 2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서비스 강화 3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구현
4.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	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2 피해 주민 맞춤형 복구지원체계 확립 3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 4 국민 불안이 큰 중대재난 대비태세 강화
5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	1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2 국민안전 및 생명수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3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

【1.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·균형발전 추진】

1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

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

3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

4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1-1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

□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

○ 지역경제, 생활환경 등 **주민생활 관련 기능 패키지 이양**

- 국토·해양수산·중소기업 등 **특정분야 기능중심 선도과제 발굴·이양**

※ 중앙·지방 협력을 통한 이양기능 발굴 및 권역별 현장토론회 실시

-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「지방이양일괄법」 제정 추진

○ **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조직자율성 확대**

* 지자체 정원관리 및 과(課) 설치 자율화,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조직특례 확대 등

○ **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**

- **사무 배분*** 및 **수사권·조직·인사·재원 등** 합리적 자치경찰 모델 마련

* 예) (국가) 전국적·통일적 치안(대테러, 정보 등), (지방) 주민 밀착 치안(생활안전·교통 등)

□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 제고

○ 중앙-지방 소통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**정례적 정책협의체(제2국무회의)*** 운영

* 대통령(의장), 국무총리, 시도지사 및 행안부(간사) 등 관계부처 장관 참석

○ **자치권 침해 방지**를 위한 「(가칭)**자치분권 사전협의제**」 도입

-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적정성 등 사전검토 제도화 (「지방자치법」 개정)

○ 제주·세종 등 **다양한 분권 선도모델의 완성**

* (제주) 교육·의료·관광 등 기능이양으로 지방의 자기결정권 대폭 확대
(세종) 행정도시 특수성을 고려, 다양한 자치분권 테스트 베드로 설계

□ 지방 자치역량 및 책임성 제고

○ **지방의회의 기능·역량 강화 지원**

* 역량제고를 위해 예산정책센터 설치, 정책지원인력 확충 등 검토

○ **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일·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**

* **(채용·교육)** 직무과목 중심으로 선발시험 개선,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, 지방공무원 대상 국정지표별 심화과정 및 정부혁신 전문교육 운영 등
(복무)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확대,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
○ **「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」** 구축 및 정책평가·환류·공개 강화

○ **「6·13 전국동시 지방선거」 공명선거** 및 **민선7기 안정적 출범** 지원

1-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및 균형발전 기반 마련

□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

○ 국세-지방세 비중(現 76:24) 단계적 개선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

- 신장성·안정성이 큰 **지방소비세·소득세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**

  * 범정부 재정분권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통해 「재정분권 종합계획」 마련(~'18.2월)

○ 자치단체 세입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

- '보통교부세 제도' 개선으로 **세입확충 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**

  * 세입확대(탄력세율 적용 등) 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자구노력 유도

-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**신세원 발굴**, **「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」** 등 지방세입관리 인프라 개선 추진

○ **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**(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)

-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, 지방재정 확충 도모

□ 지역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

○ 지역상생을 위한 국가의 재정조정기능 강화

- **지방교부세율(19.24%) 인상,** 균형기능 강화를 위한 교부세제도 개선방안 마련

○ 재정확충과 연계한 지역간 재정균형장치 마련

- 세수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활용, **'지역상생발전기금'** 확대 등 검토

□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

○ 중앙-지방 재정운영의 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마련

- **재정총량**(중앙-지방재정 규모, 지방부담 수준), **재정운영**(지방재정 자율성·책임성), **재정성과**(효율성 · 형평성) **등 주기적 평가**(3~5년) **후 정책에 반영**

○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全 처리과정 투명 관리

- 「**지방보조금관리법**」 제정 및 지방보조금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

※ 보조사업 내역, 부정수급자 명단 등 지방보조금 관련 공개 강화

1-3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

□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

○ 주민투표, 주민소환, 조례 제·개폐청구 등 **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**

* 주민소환 및 조례 제·개폐청구 **청구요건(서명인수) 완화**, 온라인 조례 제·개폐청구 도입 등

○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 **소통·협력공간 조성**

○ **「주민참여예산제」** 확대, 유형별 우수모델 공유·확산 및 맞춤형 지원

*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, 예산편성 이후 집행·평가까지 참여절차 마련 등

□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○ **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**로 **주민의 마을자치 및 참여** 확대

* 마을계획 수립, 주민자치센터 운영, 공공시설 위·수탁 등

○ **맞춤형 보건·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**

* 방문건강관리, 찾아가는 복지상담,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

□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

○ **「마을공동체 기본법*」** 제정으로 **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**

* 공동체 정의, 위원회·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와 역량강화 지원 등 규정

○ **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**

- **청년희망뿌리단*** 확대,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, **마을기업 자생력 강화** 등

* 도시의 젊은 인재를 농·어촌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하도록 지원, 지역정착 유도

□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 지원

○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**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** 추진

- 민·관 협업으로 **인구감소지역 거점마을** 집중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

○ 도서·접경지역 등 **특수상황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**

*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·평화벨트 육성 및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

1-4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

○ 지자체 일자리사업 **신속집행**을 통한 **지역 일자리 창출** 및 현장 서비스 분야 **지방공공부문 일자리** 확대

○ **좋은 일자리** 창출을 위한 **우수사업 발굴·'지역 일자리 모델'* 육성**

- **「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**(3월)**」** 개최, 우수 일자리사업 **행·재정적 지원**

  * △청년 일자리, △중장년 일자리, △사회적경제 일자리, △일자리 질 개선 등 유형화

○ **지방 행·재정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***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기반 마련

  *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방세 지원, 지방교부세 배분 시 일자리 창출노력도 반영 등

□ 영세·소상공인 상생형 일자리 창출

○ 전통시장(야시장)·골목상권·마을기업 육성 등 **지역 영세·소상공인 일자리 창출**

○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인 **「일자리 안정자금」*** **적기·안정적 지급 지원**

  * 주민센터 및 현장 접수, 지자체·주민자치조직·서민금융기관 등을 통한 밀착형 홍보

□ 자율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혁신

○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**규제권한의 지방이양 확대**

- 기존규제 탄력적용(면제·유예·완화) 권한 이양, 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허용 등

※ (대상) 新산업·서비스·기업환경 등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규제

○ 지역상생·균형발전을 위한 **테마별* 규제개혁 추진**

- 지역간 협력을 요하거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이슈 중심 추진

  * 신재생에너지, 뉴딜도시재생, 일자리경제, 서민생활안정 등

【2. 국민이 주인되는 열린 정부혁신】

1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실현

2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

3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

4 정부운영 지원기능의 투명화·선진화

2-1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실현

□ 정부 운영의 투명성 확대

○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시 공개예정일 안내 등 **정보공개제도 개선***

* 정보공개위원회에 조사·개선권고권 부여, 준정부기관·지방공사까지 심의회 설치

○ **국민이 원하는 정부정책·사업 책임자 실명공개**(과장급→결재라인 전원)

○ **국민 삶에 영향이 큰 공공데이터**를 알기 쉬운 형태로 **투명하게 제공**

* 환경영향평가 정보,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개방

□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

○ '(가칭)**열린혁신포럼**' 등 **온·오프라인 참여 공론장*** 상설 운영

* (기존) 단순 의견 제시 → (개선) 온라인 의견 제시–오프라인 심화토론 등 유기적 연계

○ **국민이 참여**하는 **'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' 추진**

-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 선정(권역별 토론회·SNS 등 활용) → 사업 주체 공모·선정 → 문제해결사업 추진(주민 참여, 행안부 컨설팅)

* 예시) 지역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, 빈곤아동 등의 자립·돌봄 지원

□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○ 국민 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**「청원법」 개정**

- '**온라인 청원**', '일정 수 이상 서명한 청원에 대한 **답변의무**' 근거 마련

○ **공청회·청문·행정예고** 등 국민참여제도 활성화(「행정절차법」 개정)

○ **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** (「조직관리지침」 개정)

- 정책반영 **결과환류**, **위원 추천 경로 다양화**, 비수도권 위원 위촉 확대

2-2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

□ 민생현장 공무원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

○ **국민생활 접점 공무원 충원**으로 **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**·일자리 창출 견인

- 충원인력은 지구대·파출소·고용센터·119소방센터 등 현장에 **집중배치**

○ **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**으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
- 복합치유센터 설치·수당인상 등 **처우개선,** 소방 투자 **지역별 격차 해소**

□ 정부조직운영 효율화 및 현장중심 재배치

○ **부처**별 5년간 **효율화·재배치 실행계획 수립·추진**

- 연차별 목표범위에서 기능 감소·쇠퇴 분야의 인력을 전환·활용, **지역 간 불균형 해소** 및 **현장접점 강화**를 위한 **재배치 실행**

○ 정부 기관별 **인력운영 성과관리 강화**

-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정도*를 **'인력충원 성과분석 지표'**로 개발하고, 대규모 충원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적용

* 예시 : (경찰) 범죄검거율 제고, (소방) 현장 도착시간 단축, (근로감독) 임금체불 처리기간 단축 등

□ 공공분야의 현장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 추진

○ **현장과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**하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개선

- **현장방문**을 통한 **소통** 및 **상황 모니터링**, 현업공무원의 **교육·훈련 강화** 등

- **형식적 보고서·회의 감축**, 모바일 보고·원격근무로 **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환경**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착근

※ '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' 수립, 기관별 혁신실적 점검·전파(인사처 등 협업)

2-3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

□ 정부 정책 및 운영방식의 '사회적 가치' 반영

○ 정부 정책방향에 **사회통합·복지·안전** 등 사회적 가치 강화

- **정부조직관리·예산편성·업무평가** 시 **사회적 가치를 반영**하도록 관련규정 개선(기재부 등 협업)

○ 주민중심 경영체계 구축 등 **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**

※ "주민 경영평가단" 운영, 불합리한 규제 정비, 갑질방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등

□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공감적 행정서비스 제공

○ **사회적 약자**를 위한 **맞춤형 민원서비스 환경*** 확산

* 점자블록·안내판, 유모차·휠체어용 경사로, 시각장애인용 민원서식 음성변환 등

○ 장애인・기초수급자 등의 **'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' 확대**

○ **아동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**

※ 유치원·어린이집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보유 차량 감면 연장 등

□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통합 기반 강화

○ **사회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*·기부 활성화**

* 1365포털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수요-공급 매칭,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모델 발굴

○ **「지자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법」**(제정) 등 **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정비**

- 장애인·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확대, 지역사회 통합 강화

○ **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**

-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**그간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** 추진

□ 미해결 과거사의 포괄적 진실규명 추진

○ **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 기반 구축** (「과거사정리기본법*」 개정)

- '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' 활동 재개, **'과거사 통합재단'** 설립 등

※ 진실규명 범위, 명예회복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추진

○ **5.18 민주화운동 문제해결 및 제주 4.3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**

2-4 정부운영 지원기능의 투명화·선진화

□ 국가기록관리의 공정성·전문성 강화

○ **국가기록의 철저한 관리·공유 확대**를 위한 기록물법* 전면 개정

* 기록 처분동결제도 법제화, 대통령기록 지정·관리·열람 절차 재정립 등

○ **「저작권 프리존」** 운영, 소장 기록물의 자유로운 활용 지원

□ 품격있는 정부행사 운영 및 국민중심 포상문화 확립

○ **국민과 함께 하는 국경일 행사 개최**

- 다문화가정·우수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, 수요자 중심의 행사진행

○ 2018년 **「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」** 및 2019년 **「3.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」*** 기념행사 추진

* 애국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 계승, 미래비전과 희망메시지 공유 등 국민화합 행사로 추진

○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·포상하는 **「국민추천포상」** 확산

- 수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**예우 강화**(포상위원 위촉, 정부행사 초청 등)

□ 현장·디지털 중심의 고품질 과학수사 감정체계 구축

○ 현장검안 확대, 신속대응팀 등 신속·정확한 **현장대응 감정서비스** 제공

○ **디지털 기술**과 접목한 **신종범죄 해결 지원**

※ 현장감정 가능한 '실시간 스마트폰 위폐감식시스템' 시범실시 등

□ 정부청사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

○ 유휴공간을 **휴게·문화공간으로 개선**, 미세먼지 차단망 시범설치

○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**화재예방 강화, 출입 신원확인 보안 강화**

- **노후시설 선제적 정비**, 시설안전 점검·관리 철저

□ 고품질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관리 기반 강화

○ 정부 주요 웹사이트에 **클라우드 정보자원 자동확장 기능 도입**

※ ('18년)재난안전포털 등 선도 적용 ('19년~)단계적 적용 확대

○ **장애·침해 예방 및 신속복구**를 위한 통합전산환경 개선

【3. 4차 산업혁명 시대, 지능형정부 실현】

1 인공지능·빅데이터 활용, 지능형 행정 실현

2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서비스 강화

3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구현

3-1	인공지능·빅데이터 활용, 지능형 행정 실현

□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

○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」 제정 및 '공공빅데이터센터' 설치 추진

○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관리체계 고도화

*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 연계 확대 및 데이터 품질유지 의무 부과

□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지원

○ 신산업 관련 핵심 공공데이터* 발굴·개방 확대, 데이터 형식 표준화

* 자율주행차(신호등), 스마트시티(교통분석), 인공지능(의료영상) 등

○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강소 데이터 기업 육성

- 공공데이터 창업을 全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'창업콜라보 프로젝트' 추진

○ 국민·기업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제고

-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'국가데이터맵' 구축·공개
- 민간의 데이터개방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'데이터1번가' 본격서비스

□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기반 마련

○ 「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」 마련 및 범정부 핵심과제 발굴·추진

-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서비스 선도사업 추진

*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도우미,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(챗봇) 등

○ 주민생활과 밀접한 첨단기술 기반 Smart-Nation 서비스* 구현

* 지능형 CCTV 스마트관제 서비스, 전국공통 안심귀가 서비스 등

○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한 기관별 지능형 서비스 구현 지원

-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도구 및 공통기반 제공

3-2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서비스 강화

□ 모바일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접근성 향상

○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**'정부24' 서비스 확대**

- **모바일서비스 120종 추가***, **챗봇상담, 모바일 출력**기능 도입

* 전기요금 조회,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신청 등('17년620종→'18년740종)

○ **지방세 납부 서비스 모바일 기능 강화**

- **인터넷전문은행**을 통한 납부 및 **납세증명 모바일 발급** 기능 제공

□ 국민 개개인에게 딱 맞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

○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없는 **'온라인 출생신고'*** 시범도입(대법원·심평원 협업)

* (기존) 주민센터 방문 신청 → (개선) 온라인으로 신고

○ **임산부** 대상 **정부지원 원스톱 신청*** 서비스 구현 ('18년 개발, '19년 개시)

* (기존) 임신출산진료비, 엽산·철분제 지원,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6곳 이상의 관공서 방문 신청 → (개선) 온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

○ **교통범칙금** 등을 일괄조회 및 납부하는 **'바로납부' 서비스*** 구축

* (기존) 정부24 '나의생활정보'에서 일괄조회만 가능 → (개선) 납부 페이지까지 연계

□ 쾌적하고 편리한 정부 홈페이지 실현

○ 공공 웹사이트에서 **액티브X 제거 추진**

※ 액티브X 제거 뿐 아니라 실행파일(exe) 및 불필요한 설치파일도 최소화

○ 본인확인절차 간소화로 **편리한 전자정부 인증체계 도입**

- **한 번의 로그인**으로 여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**'디지털 원패스'** 실시

- 전자정부서비스에 **지문·홍채** 등 **생체인증 본인확인** 방식 적용

3-3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구현

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

○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실질화

- **이용한 정보, 위탁내역**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**구체적으로 통지**
- ‘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’를 통한 **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** 강화

○ **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위반 기업 공표기준 개선*** **등 제재수단 강화**

- 법 위반기업 **대표자**(CEO), 특별 **개인정보보호 교육** 도입

* (종전) 개인정보보호위 심의·의결 → (개선) 일정요건 해당 시 모두 공표

□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

○ 개인정보 **비식별 조치**의 **법적 근거 명확화**

- 비식별 정보를 **안전하게 활용**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를 **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명확히 규정**

○ 기업 등이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**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** (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)

□ 새로운 개인정보 위협 선제적 대응

○ **「개인영상정보 보호법」** 제정* 등 개인정보 보호범위 확대

* 몰래카메라 영상 삭제청구 권리 보장, CCTV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

○ 음성·이미지 등 **비정형 개인정보의 보호**방안 마련

-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비정형 개인정보보호 **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**
- **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**(명함, 사진 등) **노출 모니터링** 시스템 구축

【4.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】

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

2 피해 주민 맞춤형 복구지원체계 확립

3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

4 국민 불안이 큰 중대재난 대비태세 강화

4-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

□ 재난상황 공유·전파 체계 개선

○ 문제해결형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 간 **재난상황정보 공유 확대**

* 관계기관 간, 중앙-지자체 간 시스템 및 영상회의 연계

○ 긴급재난문자 지자체 신속전파체계 개선 등 **대국민 상황전파 사각지대 해소**

* 지자체 표준문안 정비, 발송훈련 실시, 지진 시 재난문자 강제 수신 조치 등

□ 재난 현장상황의 통합대응 역량 강화

○ **긴급신고전화(119·112) 통합체계 개선**으로 초기대응 역량 제고

- 긴급신고내용을 경찰·소방·해경에 동시 전송하여 반복신고 불편 해소
- 기관 간 전달시간 단축(8초→1초),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

○ **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**으로 현장 통합대응 역량 강화

* 8대분야 333개 기관, '20년까지 구축 완료('18년, 1단계로 중부권 5개 시·도 구축)

□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·훈련 강화

○ 자치단체 단체장을 비롯한 **재난업무 책임자·담당자 교육 강화**

- 단체장 재난관리 교육 추진, 담당자 전문교육(연 7시간) 관리 강화

○ 소방 등 **일선현장지휘관** 현장대응 역량 강화

- 역량교육·평가제 도입 및 구조기관 통합지휘 역량 훈련 강화 등

○ 국민참여형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한 **안전의식·대피요령 체화**

* 어린이 안전훈련 및 국민체험단 확대,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안전교육 강화

□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

○ 재난 시 **현장투입자원 공동활용 극대화**

- GIS 기반의 「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」 구축, 재난현장 주변 자원 즉시 검색·활용 지원

○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**대응매뉴얼 작성으로 현장 작동성 제고**

- 매뉴얼에 지역특성·위험도 반영, 모바일앱 형태의 매뉴얼 개발·보급

4-2 피해 주민 맞춤형 복구지원체계 확립

□ 현장 수습·복구 지원체계 개선

○ **재난현장 「중앙수습지원단」 체계적 운영**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 개선

- 재난유형별 "중앙-지방-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" 상설 운영

○ **자원봉사 기능 체계화로 효율적인 재난현장 지원**

- 「**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***」 설치, **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제정**

* 자원봉사센터(중심)+대한적십자사·봉사단체+공무원, 봉사자 모집배치 등 총괄

○ **피해자 중심의 구호·복구체계 개선**

- 이재민 구호소 기준, 구호자 배려대책 등 세심한 운영매뉴얼 마련

□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

○ 「**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**」(대통령령) 개정 추진('18.5월)

현행	시군구 단위 선포	⇒	개선	시군구 + 피해집중 읍면동

- 법령 개정 전까지, 읍면동 단위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**특교세**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

□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한 구호물자 지원체계 개선

○ 재난발생 시 필요한 **생필품·의약품** 등 구호물자 추가 지원

※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응급·취사 구호세트 외 생수, 컵라면 등 물품지원

○ 협약기업(편의점)을 통해 **재난취약지역**(도서·산간 등) **구호 사각지대 해소**

□ 풍수해보험 확대, 맞춤형 보험상품개발 등 재난보험 활성화

○ **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 확대 및 취약지역 중심 우선 지원**

- '18~'19년 시범사업(시도별 각 1개 내외 시군구), '20년 전국 확대시행

○ **공동주택 지하층*·건설기계** 침수피해 등에 대한 **맞춤형 보험상품** 개발

4-3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추진

□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선 추진

○ 재난특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**국가 위기경보체계 개선**

* 4단계(관심-주의-경계-심각) 용어 개선, 중대본·매뉴얼 운영 등 각종 재난관리에 활용

○ 독립기구인 **'(가칭)국가재난조사위원회' 설치**로 재난조사 신뢰성 확보

- **「국가재난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*」** 제정 추진

* 기구 성격, 조사절차 및 개별법상 조사기구와의 관계 등 명시

□ 국가 자연재해 저감 목표 제시 및 방재기준 관리

○ 「(가칭) **국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」 수립** 추진

- 행안부 주관으로 **수립 의무화**, 국가단위의 **중장기 저감 목표** 및 기본방향 제시

※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 추진('18.3.)

- 지자체 **자연재해예방 투자우선순위·방향 설정** 등 체계적 관리

※ 지진, 가뭄 등 최근 빈발 재해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대상으로 확대

○ **방재기준 가이드라인**에 최근 기후변화 및 복합재해(호우+강풍 등) 반영

- 부처·지역별 재해예방시설 설계기준 개정 시 새 가이드라인* 적용

* 재난예방시설 설계기준에 강우량·강설량 예상기준 상향 등

□ 사회재난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 확대

○ 자치단체 중심의 **사회재난 관리제도 도입**

- 관할지역내 사회재난 **위험성 평가** 및 **저감계획** 수립·이행

* (가칭) 「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
○ 지역내 노후산업단지, 화학물질시설,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 방재구역 설정, 보수·보강 투자 및 이행명령 등 체계적 위험 관리

4-4 국민 불안이 큰 중대재난 대비태세 강화

□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

○ '**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**'에 지진방재 개선대책 적극 반영

-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, 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 개선 등

○ 지역별 조사·연구로 **한반도 활성단층 지도 및 액상화 위험지도 제작**

- 동남권 지역 우선조사('17~'21년), 단계적 전국 확대(총 5단계, 25년 소요)

- 액상화 위험지역에 대한 자료구축, 맞춤형 보강대책 수립

○ 지진피해 이재민 **임시주거시설*** **세부운영 지침 마련**

*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요령, 입·퇴거 절차 등 마련

□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의 안전 확보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* 도입 등 **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**

- 공공건축물 → 공공건축물 + 민간건축물까지 대상범위 확대

○ **「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」** 조기 수립 (당초 : '21~'25 → 개선 : '18~'22)

※ '지진방재 개선대책'의 내진목표 반영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

□ AI(조류인플루엔자), 방사능유출 등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 집중정비

○ 감염병, 가축전염병, 방사능유출, 화학물질유출 등 **특수재난** 대비 '**정부합동 정책협의체**(행안부·소관부처·지방정부·민간전문가)' 상설 운영

- (평상시) 교육・훈련・매뉴얼정비, (재난시) **정부합동 대응체계** 가동

○ **지방정부 특수재난 담당자 대응역량** 강화 추진

- 중앙・지방 교육기관에 재난관리과목 신설, 부처합동교육 실시 등

【5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】

1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
2 국민안전 및 생명수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

3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

5-1	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
□ 안전관련 법·제도의 내실있는 운영

○ **"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" 도입**(행안부 → 각 부처·지자체)

- 안전기준 미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개선권고, 이행실태 점검·공개

○ 중대 **안전사고 유발행위**에 대한 **효과적 제재수단 마련**

* 소방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 이동 조치 및 소방관 면책권 부여, 비상구 불법 폐쇄 시 영업정지 등

□ 취약분야 안전인프라 확충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

○ **어린이 보호, 소방활동 보장 시설물 등** 필수 안전시설물 투자 확대

*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(816개),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(1,300여개소) 등

○ 재난안전 R&D 투자 확대 및 기술개발·보급 등 **재난안전산업 발전 지원**

-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정,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*으로 산업경쟁력 제고

* 지진 관련 제품(면진장치 등) 중심 시범 운영, 인증대상 점차 확대

□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신고 · 점검 · 단속 강화

○ "**안전보안관(가칭)**" 양성,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

- 집중 신고기간 운영, 안전신문고 등을 이용한 **「공익신고 활성화」** 지원

○ **국가안전대진단**을 통해 곳곳에 산재한 안전위협요인 발굴 및 해소

- 안전사고 빈발 분야, 대규모 피해 우려 분야 중점 점검

* (기간) 2.5.~3.30., (대상) 위험시설 3만개소 등 약 29만 개소

□ 범국민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

○ **체험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**으로 패러다임 전환

* (체험관) '17년 155개 → '22년 177개, (참가자) '17년 289만명 → '22년 703만명

○ **생애주기별 안전교육** 전면 확대(학생·안전담당자 중심→전국민 대상)

* (아동기) 생존수영, 보행안전, (노년기) 노인고독사 방지 교육 등

○ 취약계층 대상 **찾아가는 안전교육** 실시·**맞춤형 국민 행동요령** 보급

5-2 국민안전 및 생명수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

□ 보편적 안전권 확립 및 재난·안전사고의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국민안전 기본권 구체화를 위한 「(가칭)**국민안전 기본법**」 **제정 추진**

< 법 제정안 주요 내용 >

- '안전' 개념 정의, 각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 명시, 정부 안전정책 기본방향 설정 등 우리사회 안전관리 기본원칙 · 이념 등 천명
- 안전영향평가 실시, 원인자 책임 강화(구상권 청구) 등 선진 안전제도 도입

○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**징벌적 손해배상 도입**

- **고의·중과실**로 인한 재난안전사고 발생시, **피해액의 최대 3배**까지 **배상**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**원인자 책임 강화 및 사전 예방 유도**

※ 국민안전 직결분야 우선 추진, 안전 법률 전수 조사 후 도입 확대

○ 사망사고 다발 분야 대상으로 **종합적 국가 안전수준 측정 모형** 개발

- **분야별 통계**(피해·취약·경감지표) 및 **정책지표**(감축목표, 발생건수, 성과지표) 등 **결합**한 시범 평가, 향후 포함분야 확대 및 모형 정교화

□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대책 추진

○ **노인·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**

-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, 재난·안전 통계 및 재난대응 지원 등 반영

○ **부모가 안심하는 어린이 안전 중점 관리**

- 어린이 **식품, 놀이기구** 분야 등을 집중 보완한 **어린이 안전 종합대책** 수립

※ 질소과자 사고('17.8), 놀이기구 멈춤('17.8) 등 지속되는 어린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

□ 국민 일상 속 안전 집중 관리

○ **생활시설 관리 강화 및 안전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**

- **보행자 우선도로 지정**(「보행안전법」개정), **승강기 안전인증체계** 개편*

* 승강기 모델별 안전인증제 도입, 핵심부품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

- **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*** 및 정보 개방·공유 활성화(민·관 협의체 구성)

* (현행) 교통, 재난, 치안, 맞춤안전 → (추가) 시설, 산업, 보건, 사고안전

5-3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

□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

○ **비상대비계획**(충무계획) **보완으로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**

* 신종 위협 대비 상황·기관별 대응 구체화, 비상 시 전문병원 운영 등 미비점 개선·보완

○ **대국민 정보제공을 통한 비상시 자발적 준비 및 대처 유도**

- 충무계획의 보안 일부 해제(군사 분야 등 제외), 국민 공개
- 비상시 숙지 필요하나 국민이 잘 모르는 제도* 발굴 및 홍보

* 배급제 품목 및 배급 기준, 전시 혈액수급제도, 비상급수시설 현황 등

□ 비상시 국민보호 체계 강화

○ **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설치·관리 강화**

- 접경지역은 지속 확충, 후방은 인구 밀집된 **면(面) 지역** 위주로 확대

○ 대피소 찾기, 방독면 착용 등 **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**

○ **동원자원 및 비축물자 관리 개선**

- 자원조사 시 현지방문조사 강화, 군·지자체 합동으로 주요물자 동원능력 검증, 비축품목(314종)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조정 추진

□ 참여와 실전 대비 중심의 비상대비 교육·훈련

○ **주민참여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**(연 2회 → 4회)

※ 적 공습대비 민방공 대피훈련, 재난 대비 지진대피훈련 등

○ **을지연습의 내실화·현대화 추진**

- EMP 폭탄, 사이버테러 대응 등 맞춤형 실전 훈련, 종합상황실 내 토의·문제해결 여건 개선, 과학적 훈련 기법 도입 등